

코로나에 김치·라면 수출 쑥~ '김치라면' 글로벌 정조준

세계적으로 건강·발효식품 관심

김치 수출 9800만 달러… 40% ↑
내식행보에 라면수출 37% 급상승

농심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
삼양식품 '김치불닭볶음면' 출시 등
업계, 해외 공략 '전화위복' 기회



삼양 김치불닭볶음면



농심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



한 대형마트의 포장김치 판매대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치와 라면 수출이 증가하면서 식품업계가 김치와 라면을 결합한 '김치라면' 출시에 나섰다. 인기 있는 두 식품을 하나로 접목해 해외 시장 확대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속 '김치·라면' 인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김치와 라면 수출이 급증하며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48억 456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한 98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발효식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비슷한 김치 등 새로운 수요층을 적극 공략한 것이 매출 증가의 원인이 됐다.

라면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증가한 4억 5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해외 곳곳에 내식 행보가 지속하면서 장기보관 및 가정 내 간편 식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 라면 누적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4%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미국인 사이에서 라면이 식사 대용으로 급부상하면서 재구매율이 유의미하게 상승 중이다. 여기에 뉴욕타임스가 세계에서 가장 맛 있는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을 선정하는 등 현지 평가도 우호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라면 수요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라면=시너지 효과는?

김치·라면 시장에 당분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업계는 관련 상품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섰다.

15일 삼양식품은 불닭브랜드 신제품 '김치불닭볶음면'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김치불닭볶음면은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불닭볶음면에 접목해 한식의 품미를 강조한 제품이다.

삼양식품의 김치불닭볶음면은 올해 2월 동남아시아와 미주지역을 포함한 27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약 20개국(봉지 20억·용기 6억)를 돌파했다. 이번 국내 출시로 김치불닭볶음면은 국내외 시장 동시 공략에 나선다.

농심도 지난달 31일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를 출시했다. 두부김치면은 농심이 지난 2011년 신라면블랙 오리지널 맛을 출시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이다. 김치찌개에 두부와 라면사리를 넣는 조리법에 착안해 라면

건더기로 신김치와 두부를 넣었다.

특히 두부김치면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연내 제품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김치와 같은 식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서 두부김치면을 대체재로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국내 김치 시장 1위 업체인 대상 종집이 지난 2018년 선보인 '종가집 김치라면'은 수출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종가집 김치라면은 미국·캐나다·일본·중국을 포함한 약 20개국에서 판매 중이며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편의점 GS25가 지난 2014년 개발한 자체브랜드(PB)라면 '유어스오모리김치찌개라면'도 홍콩과 베트남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김치와 라면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됐다"면서 "특히 라면업계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매출이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찬 상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조금씩 되살아나는 희망

15일 서울 남대문장을 찾은 시민들이 시장 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확보 추진

정부, 전 국민의 60% 규모

정부가 총 3000만명 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전 국민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백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단계로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 분을 먼저 확보한다. 1도즈는 1회 접종으로 1인 2회 접종을 고려하면 2000만 도즈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000만명분(4000만 도즈)의 백신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

백신면역연합(GAVI)에 지난달 31일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달 18일 까지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학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선입금 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할 예정이다.

코백스 참여를 위해서는 도즈당 3.5달러(위험보증부담 0.4달러 포함)의 선입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데, 이 선구매 계약 비용 1723억원을 질병관리청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와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000만명 분량의 백신 선구매도 진행한다. 선구매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가격 ▲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동향,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계

ICT 수출액 152억 달러… 3개월 연속 ↑

산업부, 8월 전년대비 0.3% 올라
반도체 2.6%, 컴퓨터 98.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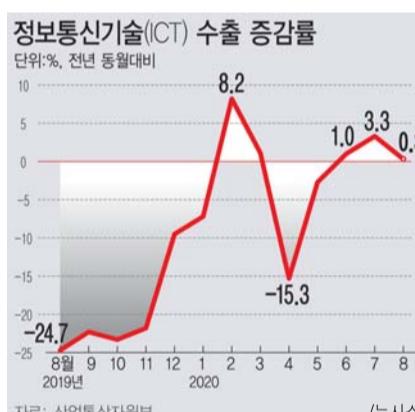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컴퓨터와 반도체 수출은 증가한 반면, 휴대폰, 디스플레이 수출은 감소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152억 4000만 달러, 수입은 91억 9000만 달러로 ICT 무역수지는 60억 5000만 달러(잠정)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6월(1.0%), 7월(3.3%)보다 떨어져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평균 수출액(6억 9000만 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7.1% 큰 폭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 컴퓨터 및 주변기기(98.2%↑)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



(-16.9%), 휴대폰(-33.0%)은 크게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서버·피씨(PC) 수요 약세 등으로 메모리(-2.3%)는 감소했으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6.0%) 호조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 등, +165.9%)를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디스플레이에는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수요 둔화와 LCD(액정 디스플레이) 생산 축소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휴대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완제품(-39.8%), 부분품(-29.9%) 동시 감소했다.

지역별로 미국(18.0%↑)은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3.3%)·베트남(-2.0%)·유럽연합(-1.8%)·일본(-16.6%) 수출은 줄었다. 미국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중심으로 8개월 연속 증가다. 일본 수출액은 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줄었다.

ICT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 10억 3000만 달러(+28.7%), 반도체 44억 1000만 달러(+12.8%) 등으로 증가했으나, 휴대폰(5억 7000만 달러, -25.8%), 디스플레이(3억 2000만 달러, -4.3%)는 감소했다.

/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1.55조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정부가 1조 5500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

업에 활용되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히 청 등 15개 부처·청의 정책방향을 종합해 수립한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교육부·국토부 등 4개 부처는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조 5500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조성해 지원한다.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를 확대하고, 해외 수요기업·국내 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글로벌 벤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스템 킴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기술이전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 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을 신속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한용수 기자